

9. '95主要業務計劃(建設交通部)

I. '95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침

부처통합을 계기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투자를 통하여, 우리국토를 보다 경쟁력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역점

□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

- 공항·항만·철도·도로 등 『국가기간교통망』을 체계적으로 구축
-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제도를 개선
- 수자원과 공장용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기업활동을 지원

□ 국민생활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

- 경제안정의 초석인 부동산가격 안정기반을 확고히 정착
- 각종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근절하여 국민불안을 해소
- 대도시 교통난완화를 위하여 대중교통위주의 교통개선 추진

□ 시장개방과 지방화에 대비한 새로운 행정체제 구축

-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, 각종 권한의 지방위임을 확대
-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중심의 지역개발에 본격 착수
-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건설업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

II.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

1. 국가기간교통망 구축

- 21세기 우리국토가 동북아교역의 중심이 되도록, 공항·항만·철도·도로 등 「국가기간 교통망」을 체계적으로 구축

가. 「신공항」 건설과 공항시설 확충

- 수도권 신국제공항은 공항뿐 아니라 정보·교역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갖추어 세계의 중심공항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육성
 - 공항지역 용지매입과 어업권 2차보상을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, 부지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'96년까지 완료
 - 활주로·터미널 등에 대한 공항시설 평면배치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, 연육교를 포함한 고속도로는 금년중 민자로 착공
- 기타 지역거점공항 개발과 기존공항의 시설확충도 지속 추진
 - 영동권 신공항과 청주공항을 개발하고, 김포·제주 등 항공화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항에 화물터미널을 건설
 - 김해 국제공항에 활주로 1본을 신설하고, 울산·여수 등 지방 소형공항에 중형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

나. 항만시설의 확충

- 부산항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항만기능을 확충하고, 교통 및 배후지원시설을 선진화하여, 일본·중국 등 주변국화물도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의 거점항으로 육성
 - 금년중 가덕도는 신항만개발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고, 가덕-거제간 연육교는 민자 유치로 건설을 추진
- 광양항등 여타 항만도 차질없이 개발

-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2대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고, 원활한 컨테이너수송을 위하여 전용도로와 철도를 개설
- 서해안시대와 대북방교역증가에 대비하여 아산항과 군장신항 및 동해항을 개발하고, 인천항의 기능을 강화

다. 「고속철도」 건설등 철도수송능력 확충

- 경부·호남 및 동서고속철도를 예정대로 추진하되, 통일후 경의선·경원선과 연결되어, 중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성
-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 - 천안-대전간 노반공사를 계속하고, 금년중 서울-천안간 노반공사에 착공
 - 수도권 중앙역사의 위치와 대구·대전역의 지하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설계에 착수
 - 금년 6월부터 차량제작에 본격 착수하여 '99년까지 서울-대전간을 운행할 차량 12편성을 제작·도입
- 호남고속철도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('94. 9~'95. 9)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중 노선·정차역위치·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정부계획을 확정
- 동서고속전철은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 추진
- 기타 간선철도의 수송능력도 지속 제고
 - 가장 애로가 심각한 수원-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과 영동선 전철화 등 주요간선을 계속 확충
 - 전라선 직선화사업을 조속 완료하여 광양항 컨테이너화물 처리를 지원하고, 호남선 복선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
 - 공단과 항만 연결철도를 확충하여 산업활동을 지원
 - 일로-대불공단간 인입철도 부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
 - 아산항·광양항·군산항 등 주요항만의 인입선건설을 추진

라. 도로망의 확충과 운영효율 제고

- 도로는 전국 수송량의 90%를 담당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, 임기중 도로능력을 1.6배 (교통량증가 1.3배)로 확충하는 계획 추진중
 - 금년중 고속도로 16개사업과, 국도애로구간 확장 및 병목지점 개선, 공단연결도로 등에 중점 투자
 - ※주요 고속도로 사업
 - 준공(10개) : 제2경인중 광명-일직(4.7km), 시흥-안산중 일직-안산(10.2km)
서울외곽중 관교-안양(15.9km), 양산-구포(16.3km)
확장은 반포-양재(5.2km), 옥포-내서(64.3km), 냉정-구포(22.2km)
대구-안동(87.5km), 원주-제천(38.0km), 홍천-춘천(26.0km)
 - 착수(2개) : 대전-함양(103.0km), 대구-대동(80.2km)
 - 계속 : 서해안 등 12개 사업
 - ※주요 국도 사업
 - 국도포장 100%달성을 위한 2차선 포장 완료
 - 주요 공단연결도로 등 지원도로 37개소 468km의 4차선 확장
 - 지역연결도로 및 교통혼잡구간 100개소 1,281km의 4차선 확장
 - 읍·면급 도시외곽 우회도로 20개소 건설
 - 도로관리 및 운영강화 등
- '94년 제정된 「민자유치촉진법」에 따라 상반기중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착수
 - 고속도로 장래건설 계획노선중 타당성이 있는 구간
 - 지방도시를 통과하는 우회도로와 장대터널 등
- 중국·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도로망 연결과 남북교역에 대비하여 기 수립된 7×9의 국가 간선도로망계획을 정비
 -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남북 7개축중 북한과 연결키로된 4개축은 연결을 위한 구축계획수립에 착수하고, 2개축은 중국·러시아와 연결되도록 도로망 구상계획을 수립

- 국도의 간선기능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
 - 주요공단·항만 등 산업시설 연결도로와 도시간 직결노선은 국도승격 등 확충방안을 강구
 - 수도권·부산권 등 대도시권 도로망 정비계획을 광역개발계획에 반영
 - 도시통과국도는 우회도로로 지정하여 건설·관리하는 방안을 검토
- 통행안전 및 도로시설보호를 위하여 도로관리업무를 강화
 - 국도유지사무소의 기구와 인원을 보강하여 신속한 보수와 적절한 관리를 도모(최근 20년간 업무량 3.2배, 인원 1.4배 증가)
 - 과적차량 단속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, 벌칙강화등 개정된 법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, 관련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

2. 물류체제의 개선

-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물류비용을 선진국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제도를 개선
- 물류체제개선을 위하여 거점별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지속 추진
 - 작년말 착공한 수도권(의왕)과 부산권(양산) 화물기지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금년중 중부·영남 및 호남권에도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
- 도로·철도·항만 등 수송수단별로 물류정보망을 조속히 완료하고, 금년중 이를 상호연계하는 「종합물류정보망」 구축에도 착수
 - 전자문서화를 통한 수출입화물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시범사업을 선정·운영하고, 전자교환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
- 물류관련 시설과 장비를 KS규격화하는 물류표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, 표준규격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
- 물류체제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

- 생산과 도소매를 연결하는 유통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중 「유통단지개발 촉진법」을 제정
- 물류정보화·표준화 등의 추진근거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「화물유통촉진법」을 전면적으로 보완·개정

3. 수자원 및 공장용지의 체계적 개발

가.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

- 2001년까지 9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수자원이용율을 23%에서 26%로 제고하고, 31개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추진하여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33%에서 49%로 제고
- 금년에는 건설중인 6개댐중 부안댐을 완공하고, 계획중인 3개댐중 탐진댐의 용지보상에 착수
 - 건설중 : 남감댐(5.7억톤/년), 용담댐(6.5), 부안댐(0.4)
 황성댐(1.1억톤/년), 밀양댐(0.7), 영천댐 도수로(1.0)
 - 계획중 : 탐진댐(0.9억톤/년), 영월댐(1.9), 적성댐(1.5)
-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건설중인 13개사업중 금호강 및 주암댐 광역상수도과 울산 공업용수도를 완공하고, 4개 광역상수도 사업을 새로이 착공
 - 건설중(13개) : 금호강(청도계통)·주암댐(목포계통)·수도권V·충주댐·낙동강II
 ·주암II·부안댐·전주권·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·울산공업(양산계통)·아산I·녹산·광양공업용수도
 - 신규착공(4개) : 제주도·밀양댐·울산권·포항권 광역상수도
 - 조사설계(8개) : 대청II·남감II·동화댐·임진강·황성댐·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,
 군장·광양III공업용수도
- 2000년대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댐후보지를 조사하고,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증장기계획 수립을 추진

- 5대강수계 수해상습지 등 하천 166km를 개수하되, 굴포천 치수사업과 연관된 경인운하
는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
-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확대 실시
 -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보전·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실태 및 지하수
위조사를 실시
 - 남북한간 수자원 공동개발과 수도권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임진강유역 조사를
실시
 - 장기적인 가뭄대책과 수질사고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 등 29개
지점에 대한 갈수량조사를 실시
- 갈수시 하천수량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로 예상되는 지역
간 물분쟁 조정을 위하여, 「하천수이용에 관한 협의회」등의 제도화 추진(하천법 개정
추진)

나. 공장용지의 체계적 개발

-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기간('92~2001)중에는 3,000만평의 공장용지가 소요될 전망되
므로, 동기간중 총 3,500만평의 공장용지를 개발·공급하여 수요에 여유있게 대응
- 금년에는 지역별 수급상황과 지역균형개발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단중심으로 총 400만
평의 공업단지를 새로이 지정
- 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전자·통신 등 첨단공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장용지
개발 및 분양방식을 개선
 - 일정규모 이상의 공단에는 창고 등 물류센터·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·스포츠센터
등 위락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유도
 - 공단분양을 촉진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공단제도를 도입
 - 지방과학산업단지를 차질없이 개발하고, 주요 연구기관이나 대학주변에 산학협동단지
의 개발을 지원

- 작년에 개선한 공단개발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시책이 일선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, 공단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대책을 강구

III. 국민생활의 불안과 불편해소

1. 부동산가격의 안정

가. 부동산시장 전망

- 토지·주택 등 부동산가격은 '91년 하반기 이후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

	'89	'90	'91	'92	'93	'94
· 토지가격	32.0%	20.6	12.8	△1.3	△7.4	△0.7
· 주택가격	14.6%	21.0	△0.5	△5.0	△2.9	△0.2

- 최근 2~3년간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었고, 특히 금년에는 경기활성화·지자체선거 등 부동산가격의 불안요인이 점점
-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경우, 국민위화감은 물론 애써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거품화되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투기만은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

나. 토지투기 방지대책 추진

- 토지거래·지적·공시지가 등을 연계한 「토지종합전산망」을 본격·가동하여 토지의 소유와 거래에 관하여 철저히 파악함으로써, 사실상 토지실명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 거양

-거래빈번자와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 및 변동현황을 특별관리하여 세금 탈루와 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

※특별관리 대상

- 토지과다보유자(전체 소유자의 1%)

- 30대 그룹사 계열기업(616개)과 그 임원
 - 토초세 과세대상자 · 택지 초과소유자 · 증여자 등
 - 투기우려지역(토지거래 허가구역 등)
- 동향감시반을 상시 가동하고, 투기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즉각 가동
- 개발사업예정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미리 지정하고,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
 - 미이용방치시 과태료(200만원이하)를 부과하고, 선매 등 유희지조치
 - 토지거래허가 · 신고 및 검인단계에서 실거래자와 가격을 노출시키고, 명의신탁 · 증여 등에 의한 불법거래 방지수단을 마련
 - 택지소유상한제 · 개발부담금제 · 지가공시제 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· 발전시키는 한편, 외국인 토지취득허용에 따른 투기요인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
 - 이와 아울러, 토지이용규제 완화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土特회계에 의한 토지 매입도 활성화 하는 등, 토지공급확대와 수급조절 시책도 병행

다. 주택공급의 확대와 집값안정

- 금년중 55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율을 84%로 제고

	'92	'93	'94(추계)	'95(전망)
· 주택 건설	575천호	696	590	550
· 주택보급율	76.0%	79.1	81.5	84.0

- 공공부문에서는 총 3조 9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소형주택 20만호를 건설하고, 민간부문에서는 35만호를 건설
 - 공공부문
 - ┌ 공공주택 : 15만호(청약저축가입자, 호당 1,400~1,600만원 용자)
 - └ 근로자주택 : 5만호(제조업체근로자, 호당 1,600~1,700만원 용자)
 - 민간부문 → 민영주택 : 35만호(청약예금 및 부금가입자, 민영자금 용자)
- 주택건설의 관건인 택지확보를 위하여 광역개발 등과 연계하여 택지개발을 지속 추진

- 특히, 수도권 택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단위 택지개발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재개발·재건축 등도 활성화
 -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「주택개량재개발 기본계획」을 수립토록 하고, 사업시행절차도 간소화
 - 재개발·재건축사업 추진시 각종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조합의 내부규약을 표준화
- 각종 주택자금이 적기에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
 - 국민주택기금중 1·2종채권과 청약저축 등에 의한 기금조성이 감소되는 것에 대비하여, 차입금확대 등 재원방안을 강구
 - 「주택사업공제조합」에서 채권발행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, 주택업체에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(재정경제원 협의)
- 주택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건설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
 - 실제 발생한 비용은 전액 분양가에 반영토록 하고, 표준건축비도 자재·노임 등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기인상 추진
 - 사업계획 승인시 간선시설 등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억제
- 전월세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촉진
 -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산정방식을 급지별 정액 고시제에서 원가연동 방식으로 개선
 - 작년에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
- 주택전산망운용 내실화·주택가격 동향감시 및 관계부처합동 투기단속 등 주택투기 방지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

2. 부실공사 척결과 안전사고 예방

가. 부실공사 척결

- 앞으로 건설업계 종사자의 의식과 관행이 바뀔 때 까지, 부실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, 부실업체와 관련자는 업계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
 - 작년부터 추진해 온 공사현장점검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는

일벌백계로 조치

- 부실시공의 원천적인 방지를 위하여 설계·감리부실도 강력히 처벌
 - 부실설계자 : 제재규정 없음. →5년이하(5천만원)
 - 부실감리자 : 2년이하 징역(벌금 1천만원) →5년이하(")
- 경미한 부실사례라도 누적되면 가중처벌 되도록 조치하고, 업체별·개인별로 카드를 작성하여 끝까지 추적·관리
 - 건설업체 : 시정명령→영업정지→면허취소
 - 기술자 : 경고처분→업무정지→자격취소
- 지금까지 부실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해 왔지만, 아직도 미흡한 몇가지 분야에 대하여 재정경제원·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제도보완을 추진
-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, 기술등 품질관리능력이 많이 참작되도록 보완
 - 입찰자격 사전심사제(PQ)를 현행 100억원 이상 14개 공종에서 55억원이상 18개 공종으로 확대
 - 특수·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기술능력·공법 등을 가격과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「최적격낙찰제」를 실시
- 부실요인의 40%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, 우선적으로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
 -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자체를 제 3자가 감독하는 「설계감리제도」를 도입
 - 공사 착수전, 시공자가 설계내용을 사전 검토토록 의무화하고,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「중앙설계심의위원회」의 기능을 강화
- 현장에서 공사진행 상황을 지도·감독하는 「책임감리제도」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
 - 고속철도·신공항·특수교량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는, 감리시장 개방이전이라도 외국감리회사를 활용
 - 현재 50억원이상 공사에만 시행되고 있는 「책임감리」를 교량·터널공사등 주요구조물에는 50억원미만에도 실시
- 레미콘·철근·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제도상의 결함으로 공사현장에서 적정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, 레미콘 생산제도와 자재 관급제도 등 일부 불합리점을 시정

- 대형·특수구조물의 경우, 시공자가 자기책임하에 공사현장에서 일관된 품질의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
- 철근등 관급제도도 수급조절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만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급제도로 전환
- 하도급질서의 확립을 위해 하도급계열화·부대입찰제등 관련 제도를 정착하는 한편,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
 - 하도급계열화 대상업체 확대 : 421개사→571개사
 - 부대입찰제 확대 : 100억원이상 14개 공종→55억원이상 18개 공종
- 건설공사는 결국 현장기능인력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, 앞으로 기능인력이 직업윤리 회복을 통하여 공사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
 - 기능인력에게도 경력수첩을 발급하는등 제도권에서 흡수·관리
 - 건설기능경기대회나 명장제도등을 활성화하여 장인정신 함양
 - 공공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강화
- 이와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(작업전 구호합창·성실시공 안내간판 및 플래카드 부착 등)

나.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

- 우리나라는 교량등 주요시설물이 20~30년이 경과함에 따라,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각종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실정
- 작년말 제정된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금년부터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시책을 본격 추진
 - 교량·터널·지하철 등 주요구조물과 공동주택·대형건축물 등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,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, 즉각 철거·개축·사용제한 등 조치
 - 주요 시설물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,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하자책임을 해제
 - 안전진단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중 「시설안전기술공단」을 설립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는 한편, 하반기중 민간의 「시설물 유지관리업」 등록

을 실시

- 작년말 일제점검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교량·지하철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하여 본격적인 개·보수에 착수
- 보수대상 588개소는 총 89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중 보수를 완료
- 개축대상 400개소중 금년에 총 2,497억원을 투입하여 316개를 완료하고, 나머지는 내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

다. 안전수송의 확보

-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년에 수립된 「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」을 착실히 추진
- 도로분야에서는
 - 범국민적인 안전운전·양보운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
 - 교통신호기와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, 사고가 많은 지점을 지속적으로 개선
 - 화물차 적재함에 등록번호를 표기토록 하고, 대형화물차에 속도제한기 부착을 추진
- 철도·지하철분야에서는
 - 자동차의 통행량과 위험정도에 따라 건널목을 입체화 하거나 전동차단기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
 - 전동차량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차량부품인증제를 도입하고, 주요부품은 예비품확보를 의무화
 - 전동차량은 최초 운행하기전 일정기간동안 시험운전을 의무화하고 정기점검을 강화
- 해운분야에서는
 - 해상교통량이 많은 부산·광양등의 항만에 「해상교통 관제시스템」을 연차적으로 설치
 - 노후여객선 등 사고취약선박은 선명록을 작성하여 입·출항시 승선점검하고, 결함선박근 운항을 통제
 - 주요 연안여객선 기항지에 선착장과 터미널을 확충하고, 운항관리자 등에 의한 안전점검을 철저히행

○ 항공분야에서는,

- 항공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
- 수직돌풍 탐지시설·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등 항공기 안전운항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
-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, 부족인력의 조기확보를 추진
- 금년 3월부터 항로관제업무를 군으로 부터 인수 운영하고, 계기착륙시설 등 항공보안 시설의 현대화도 지속 추진
- 금년중 블랙박스 해독장비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확보

3. 대중교통위주의 교통개선 추진

가. 도시철도중심의 도시교통체계 확립

- 2001년까지 6대도시 도시철도망을 현재(316km)의 2.6배(km)로 대폭 확충(수송분담율 목표 : 서울 50%, 부산 40%)
 - 금년중 수도권·부산권 등 대도시권에 총 264.7km를 건설 추진
 - 서울 5호선(공항~고덕 52km), 7호선 강북(상계~화양 16km), 8호선 성남(잠실~성남 15.5km) 및 일산선(구과발~일산 21.1km)은 금년 상반기중 단계적으로 완공
 - 부산 2호선과 대구·인천의 지하철 92km도 차질없이 공사 시행
 - 수도권 하남과 부산권 김해에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차량전철은 작년 기본조사에 이어 금년중 기본설계를 시행
- 지하철 수송능력 증강을 위해 금년중 전동차 868량을 증가하고, 열차편성 장대화 및 운행간격단축 등 승차난 완화대책을 강구

나. 시내버스 및 택시의 운영개선

- 지하철확충시까지 시내버스를 대도시 주요 교통수단으로 육성
 - 버스 전용차선제를 대폭 확대실시(현재 57구간 238km실시중)하고, 6대도시의 일반시내버스는 금년부터 냉방화를 추진

- 도심순환버스·심야좌석버스·마을버스 확대운영 등 다양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하철과의 연계운행을 강화
- 고급교통수단으로서 택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
 - 모범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하고, 행정구역 위주로 되어 있는 택시사업구역을 생활권중심으로 조정
 -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제 등 새로이 도입된 제도를 착실히 시행

다. 적극적인 도시교통수요 관리시책 추진

- 주차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으로 승용차의 도심통행수요를 억제
 - 시의곽지역의 전철역, 전철과 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등에 민자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대폭 확충
 - 혼잡지역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, 지역별·시간대별로 주차요금을 차등적용
 - 승용차 함께타기, 다인승차량에 대한 우대, 렌트카 활성화 등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
- 부처통합을 계기로 도시계획차원에서의 근원적인 교통수요감축 대책도 전개
 - 직장과 주택이 서로 가까운 곳에 있도록 도심의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도심인접의 주택개량 재개발을 활성화하여, 출퇴근 교통수요를 감축
 - 도심에 집중된 쇼핑 등 교통유발시설도 도시외곽에 분산 배치 하고, 신도시 등의 자족기능도 강화하여 교통수요를 분산

라. 지역간 여객운송의 획기적 개선 추진

- 시외버스의 효율적인 운행과 편리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
 - 명절연휴에 실시중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주말·휴일에 확대실시하는 방안 검토
 - 시외버스 차량의 고급화·다양화를 추진하고, 우등고속버스 및 심야고속버스의 운행을 확대
- 철도 경영개선과 안전수송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'96.1 업무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

인 철도공사화를 차질없이 준비

III. 시장개방과 지방화에 대비한 행정체제 구축

1. 행정규제완화와 지방위임 확대

-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는 과감히 철폐
 - WTO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경쟁상대국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관련 규제를 재정비
 - 국민생활과 관련된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최대한 없애나가고, 공익상 불가피한 규제도 그 권한은 지방에 이양
- 본격적인 지자체실시를 계기로 지방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 개발을 추진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
 - 토지이용이나 도시계획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방에 위임하고, 국가는 2개 이상의 시·도가 관련된 광역개발 등에만 개입
- 건설교통분야의 현안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식 「본부장제」를 운영
 - 부동산투기·건설안전·수송대책 및 규제완화등 4대 당면과제는 1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책임운영 체제를 가동
 - 주요 현안과제가 생길 때 마다 본부장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

2. 지방중심의 지역개발 본격착수

가. 7대 광역권개발에 본격 착수

- 지방대도시와 서해안 신산업지대가 세계와 직접 교류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, 「광역권개발」에 본격 착수
 -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「아산만권」과 「부산-경남권」은 금년에는 택지·공단 등 민

자유치사업과 정부투자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, '96년부터 예산에 반영추진

-군산-장항권·대구-포항권·광주-목포권 및 광양만권은 금년 상반기중 개발계획을 확정

-대전-제주권은 금년 상반기중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'96년부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

○개발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진 낙후지역은 관광·레저·농산물가공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소지역단위로 개발

-이를 위하여 이들 지역을 '95년 상반기중 지역균형개발법상의 「개발촉진지구」로 지정

-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, 국고지원 확대와 민자유치를 촉진

나. 지방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

○도시의 불균형발전을 시정하고 21세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체계를 정비

○본격적인 지자제와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전면적인 도시계획재정비에 착수

-용도지역·지구의 분류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, 중복되는 지역·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불편을 해소

-도로·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원·유원지 등 편익시설을 충분히 배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

○그동안 각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던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에 따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

○국민불편해소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축행정을 쇄신

-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고,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감리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

-각종 건축의 표준화를 위한 설계지침서를 마련하고, 건축통계 전산화를 본격 추진

3. 시장개방대책 건설산업의 세계화 추진

- 우리 건설업은 '60년대 중반 해외에 진출한 이래 '94년말까지 총 1,117억불을 수주하였으며, 80년대 중반부터 부진했던 수주는 세계경기회복과 적극적인 건설외교노력에 힘입어 '93년부터 회복세

	'60년대	'70년대	'80년대	'90	'91	'92	'93	'94
※ 해외건설수주	1억불	302	631	68	30	28	51	74

- 최근, WTO체제 출범에 따른 건설시장개방과 APEC국가간 협력증진 등으로, 우리건설업은 '70년대 중동 건설붐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맞고 있음.
- 이에 따라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한 건설업 체질강화와 아울러,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
- 금년중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한 각종 제도정비를 마무리하는 한편, 해외건설 본격진출을 위한 시장다변화와 수주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

※ 건설시장 개방일정

- 민간건설시장

- 일반건설 : '94부터 100% 단독투자, '96부터 지사설치 허용
- 전문건설 : '96부터 100% 단독투자, '98부터 지사설치 허용

- 공공건설시장 : '97년부터 일정규모이상 공사는 개방

가. 국내건설업의 국제화 추진

- UR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각종 건설제도의 국제화 추진
 - 건설업법·계약관계법 등 관련법령과 입찰공고를 영어로 표기
 - 외국업체 및 기술자, 전문자격자에 대한 국내인정방안 마련
 - 외국업체와의 분쟁해결기구 마련 및 절차보강 등
- 계약·입찰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건설업체의 종합건설능력을 배양
 - PQ심사기준 보완 및 대상공사의 확대, 공사비 산정제도의 개선

- 턴키입찰 및 대안입찰의 활성화 등
- 개방압력과 외국업체진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에 집중된 공사발주권한과 기능을 점차 시행기관으로 분산
 - 시행기관의 자체발주공사의 범위를 확대
 - 도급한도액제도를 도급등급 심사제도로 전환
 - PQ심사 등 입찰 세부집행기준은 시행기관장이 자체 제정, 시행
- 우리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·학·연·관의 공동연구개발체제를 구축
 - 정부출연 및 공동출자를 통하여 기초기술과제 개발에 역점
 - 신기술지정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업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
- 건설교통부·업계 및 단체·학계·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「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」를 통하여 제도개선 및 실천사항을 점검하는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

나. 해외건설진출 확대

- 최근 해외건설 발주시 세계적 추세인 시공사 금융조달방법(프로젝트 파이낸싱)에 대한 우리업체의 대응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
 - 연불금융·경험기금(EDCF) 등 정책금융 이용여건을 개선하고,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등 해외투자여건도 개선
 - 금융조달기법에 관한 업체 실무자교육을 강화
- 해외건설정보 수집 및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주재 건설관 등을 통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, 해외시장 공사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
- APEC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주요 진출유망국가와의 건설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
 - 필리핀·인도네시아 등 APEC회원국가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관련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추진
 - 미국·일본 등 선진국시장에 대하여는 양자간 협상을 강화하여 '97년이후의 공공시장개방에 대비
 - 중국·베트남 등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경험지원사업이나 국제차관사업등의 참여를 통하여 수주 확대